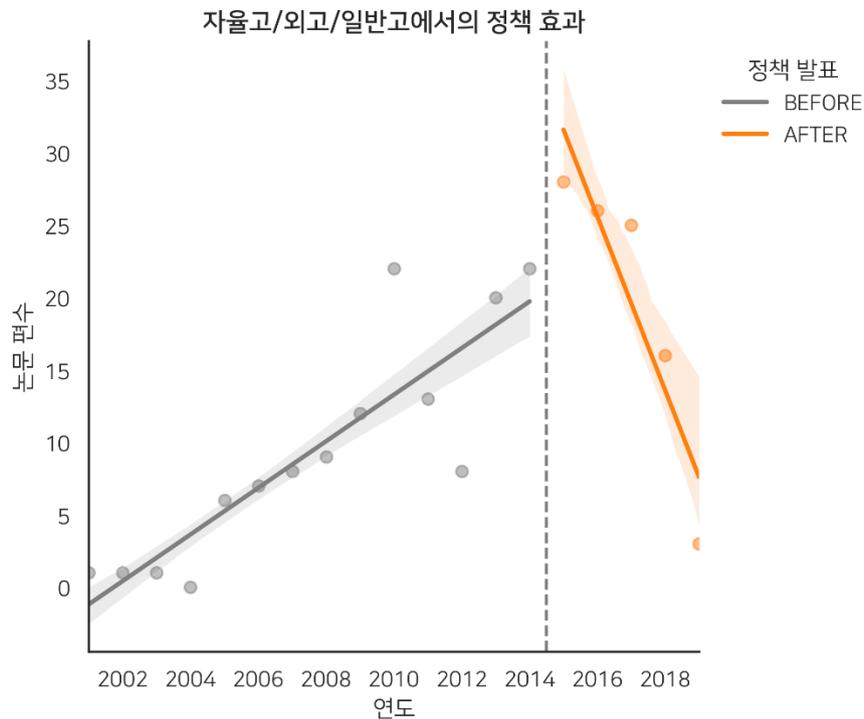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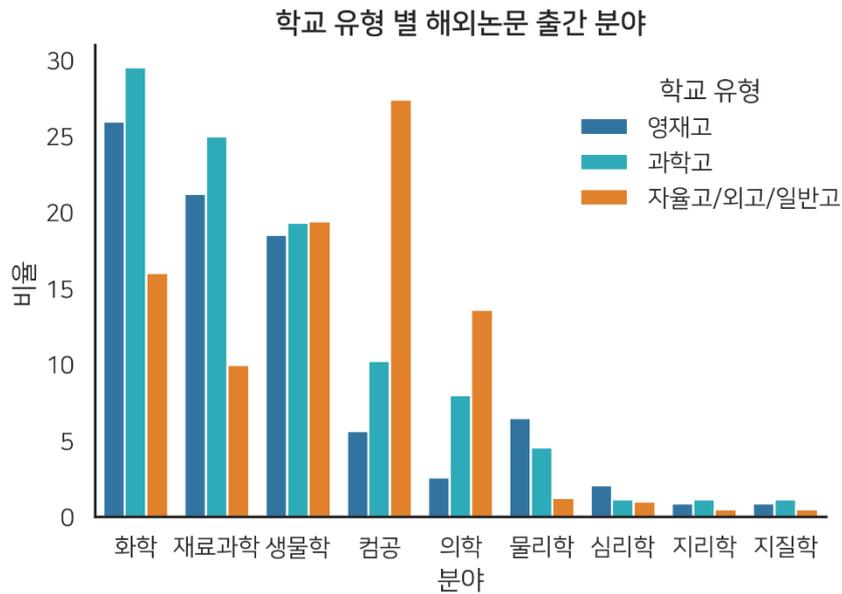
데이터로 알아보는 고등학생 논문 작성 실태

- 우리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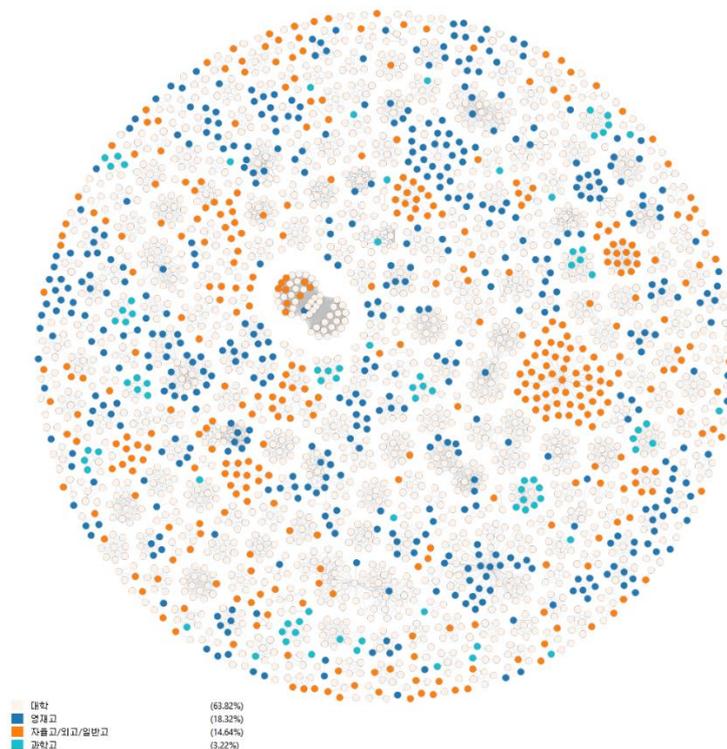
강태영(언더스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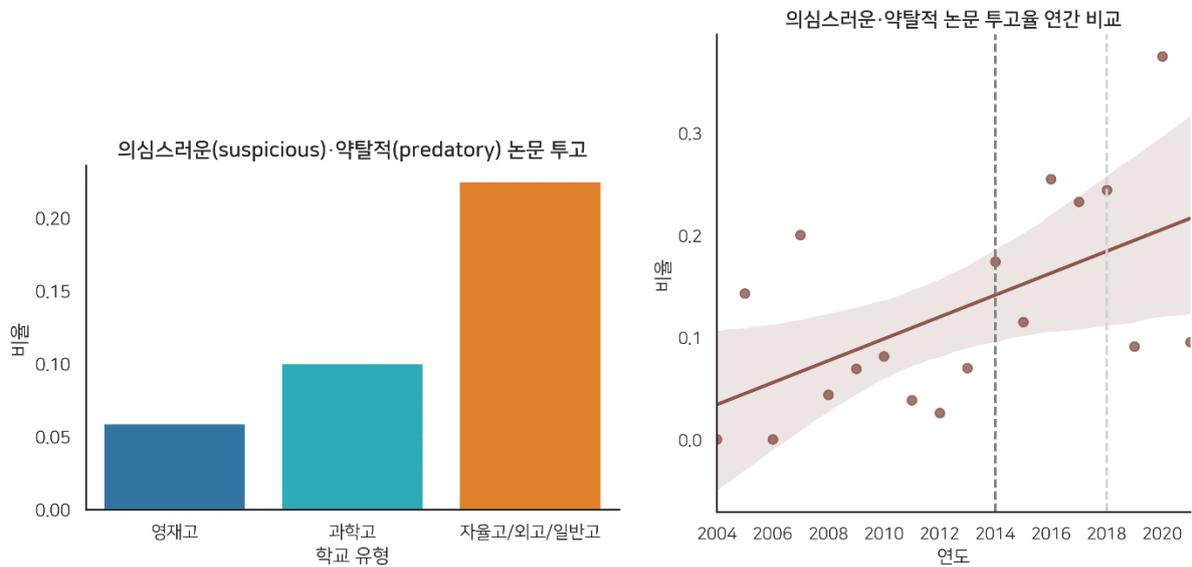
우리는 200여개 상위권 고등학교들의 국제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전수조사하며 "과연 고등학생의 논문은 재능을 표출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인지, 아니면 입시용 전략적 수단에 가까웠는지, 둘 중 어떤 쪽의 비중이 더 컸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만약 정말 재능 표출의 결과물이다? 입시 정책 변화에 따라 차이가 없어야 함. 그러나 반대로 돈으로 만드는 대입 수단이다? 입시 정책에 따라 경향성이 바뀔 것. 조사 결과, 2014년에 교육부가 논문 학생부 기재 금지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학생 논문 작성량이 점차 증가했지만, 발표 이후 오히려 급락. 특히 이러한 급락은 특정 유형의 특목고에서 강하게 관찰되었음. 그 외에도 이 고등학생 저자들 중 70%는 딱 한 번만 논문을 작성함.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 시, 학생과 교사들끼리 '만' 논문을 작성해 제도적인 고교-대학 협력과정을 거친 결과인지 의문스러운 케이스도 많았음. 정리하자면, 논문 작성이 입시를 위한 도구로서 부정하게 사용된 비율이 더 높다는 정황이 다양한 증거로 관찰됨.



논문 작성에 참여한 고등학생 저자들은 20년동안 980명. 평균적으로 한 주제 한 명 씩 쓴 것. 주제들의 경우 워낙 다양하기에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데이터로만 말하기 어려움. 다만 일부 고등학교 유형에서는 최근 트렌드에 걸맞은 '컴퓨터공학'이나 학교 교육과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학' 논문의 비중이 높게 관찰됨. 그렇다면 부정·비리의 가능성은 어떠할까? 데이터만으로 그 답을 알기는 어려웠음. 모든 연구진이 대학 교수인데, 혼자서만 고등학생인 케이스도 있고, 이 경우 정말 천재적이어서 연구에 참여한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인맥으로 연구진에 합류했을 케이스도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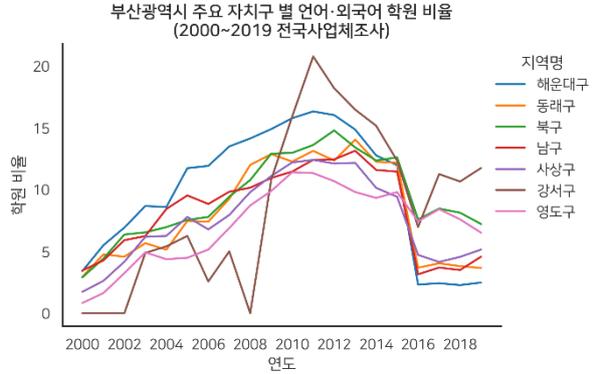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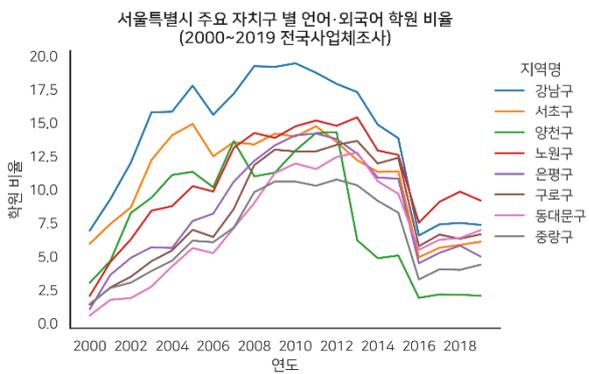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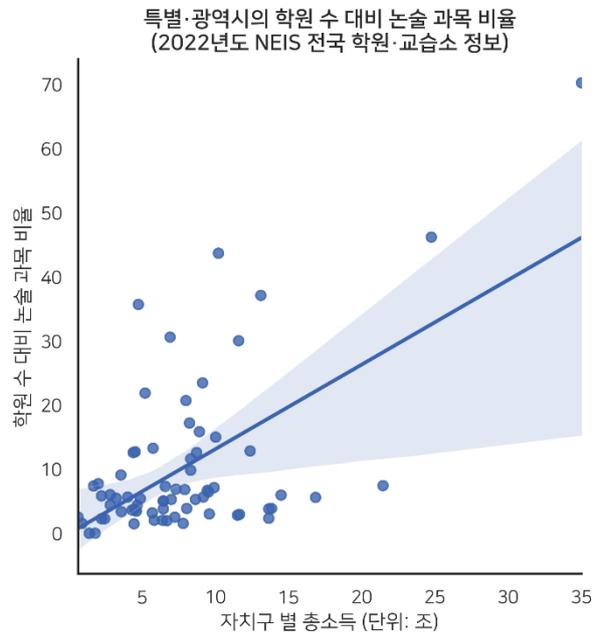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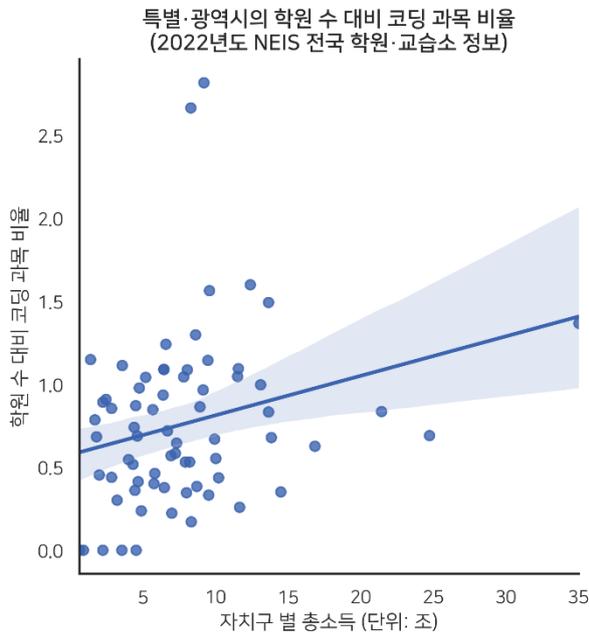
연구 결과로도 보이는 양상은 그물망 모양으로 시각화한 "연구 공저자 네트워크". 특정 교사를 중심으로 외부 학계의 도움 없이 학생들끼리'만' 반복적으로 논문을 작성한 사례도 있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어떠한 경로로 학술 논문을 해외에 투고해온 것인지 궁금함.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것이 현실적일까? 기본적으로 논문 나오는 속도가 학과마다 다름. 심리학이랑 컴퓨터 공학은 1년에 네다섯개 혹은 그 이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불가능한 속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진지한 학자라면 "돈만 내면 실어주는 학술지에 아무 논문이나 투고"하지는 않음. 제도적으로 대학 연계 소논문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함.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여행 한 번 씩 가듯 여기서 논문 작성은 자연스러운 것. 이건 뭐 그렇게 이상한게 아님.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식 프로그램도 없는 학교인데 논문 작성량은 엄청 많다? 잘 납득이 되지는 않음.



게다가 의심스러운, 혹은 약탈적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의 수에서 분명한 패턴이 관찰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사한 국제 학술 논문 558건 중 72건이 의심스럽거나(suspicious) 약탈적인(predatory) 기관에서 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문제가 되는 논문의 비율은 영재고 5.9%, 과학고 10%, 자율고·외국어고·일반고 22.4%였음.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 연간 추세는 2014년도와 2018년도의 두 번에 걸친 논문 기재 금지 정책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음. 심지어 2020년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공저 국제 학술 논문 중에는 무려 37.5%가 의심스러운 약탈적 논문들. 2014년도와 2018년도의 두 차례에 걸친 정책 이후에도 논문을 작성하는 케이스는, 정황 상 해외 학부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반 고등학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과연 "논문의 입시에의 반영"을 폐지하면 (사실 이미 폐지됨) 교육 불평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의 분석의 결론은 절대로 정시 100%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님. 일련의 문제들의 핵심은 "돈으로 학벌까지 사려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학부모·학교와 이에 동조하는 외부인이 있다는 것". 가령

몇 년 전에는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서 내신 성적 조작 사건이 벌어짐. 그러면 내신 반영 폐지할건가? 그런가하면 인강 1타 강사가 시급 몇 천만원 씩 받고 수능 과외 해준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님. 그럼 수능을 없앨건가?



(입시 공정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잦은 입시 변동성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경제 수준에 따른 불공정성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음. 한국에서 입시 관련 논의는 상당히 정례화되어 있음. (새로운 입시 정책의 도입 → 부정/비윤리/비리 사례가 발생 → 아 이 산이 아닌가. 다른 산으로 갑시다 → 무한반복) 그러나 이러한 변동성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많아야 하고, 자연스레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은 대학 입시 정책을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결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역(reverse)의 가능성에도 주목해야함. 즉,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 차이가 원인이고 (잦은 정책 변동의 시발점이 되는) 입시 정책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는 그 결과일 수도 있음. 어떠한 입시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지를 논의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겠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입시 정책이 자주 변경되어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지는 않도록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